

“민·혁 합당” 제안에 조국, 조건부 선긋기… 텃밭 정가술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합당 공개 제안에 조국 “당원 목소리 경청”
민주당 내부서도 통합 제안, 조 대표 “메기 역할” 줄곧 거리뒀와
최대 텃밭인 광주·전남서 전략적 연대, 통합공천 가능성 커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하고 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북 전주시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합당 제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두 정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메기 역할과 건전한 경쟁을 강조하며 합당에 명확히 선을 그어온 조국 대표가 이번엔 ‘조건부 선긋기’로 사실상 화답하면서 정가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합당을 제안한 뒤 실무태이블 구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고, 22대 총선은 따로,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삼판’을,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단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으로, 양 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고, 6월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합당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줄곧 제기돼온 전략적 제안이다.

광주·전남 최다선(5선) 의원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전남 정치부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과 함께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 “이재명 정권 최대 개혁, 최대 혁신은 정권 재창출”이라며 통합 사유로 ‘정권 재창출을 첫 손에 꼽았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총수도 윤석열 검찰에 의해 몰살당했는데, 대선 때 자당후보자를 내지 않고 열심히 (민주당) 도와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며 “당장 2026년 지방선거부터 민주당, 혁신당 주자들이 공천권을 놓고 함께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호남에서의 경쟁과 함께 ‘메기 역할’, ‘레드팀’을 자임하며 합당에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특히, 호남과 TK(대구·경북)를 묶어 “특정 정당이 독점한 지역은 경쟁이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을 만들되 호남·TK에서는 견제 세력 진입을 노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제1호 단체장을 배출한 전남 담양을 찾아서는 민주당과의 ‘호남대침’을 시사하며 “호남 유권자의 선택지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당만 보고 찍는게 아니라 후보의 능력과 자질, 정책을 보고 찍어야 호남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해온 조 대표는 그러나, 이번 합당 제안에는 “조건부 선긋기”로 스탠스를 달리 했다. 즉각적 반발이나 거부 의사가 아닌 ‘당원 목소리’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목표에 동의한다”고 전제해 뒤 “의원 총회와 당무위를 소속히 열어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선 ‘화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호남 일정을 소화중인 조 대표가 23일 오전, 당초에 없던 5·18 민주묘지 참배를 추가한 것을 두고도 “결단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면 위로 떠오른 ‘합당 변수’로 광주·전남 선거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잖은 선거구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인식돼온 민주당 진영에선 기존 경선 구도에 혁신당 변수가 더해지며 경선판이 더욱 복잡다단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전남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주·전남 지방의회를 주타깃으로 삼아온 혁신

당 입장에서도 선거공학적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선 ‘혁신당 뒤편’으로 흑역사 공천 피해가 발생할지, 혁신당은 ‘흡수 통합’이 세(勢) 대결에서 밀리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양쪽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측 제안으로 합당설이 나온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당내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행정통합 의견 수렴”

광주시, 23일부터 직능별 공청회
공무원·환경·복지·경제·체육 등

광주시가 전남과의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해 환경·경제·복지·교육 등 직능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는 23일부터 자치구별 공청회에 이어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분야별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직능별 공청회는 23일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환경 분야부터 시작한다.

이어 경제, 복지, 교육을 비롯해 시민의 삶과 밀접한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계·현장 전문가·관련 단체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6일에는 경제·산업·시민사회단체 분야, 27일 사회 복지·노인·장애인·보건의료·여성·아동·외국인 분야, 28일 교육·청년 분야, 29일 문화·관광 분야, 30일 건설·안전·교통·노동 분야, 다음달 2일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분야, 같은 달 4일 체육분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분야별 시민공청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 제안 등을 청취한다.

또 공청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인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광주시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광주 인재교육원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직자들의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통합 정책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행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문 광주전남통합추진단장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직능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라며 “통합의 의미와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교육청, 시의회, 자치구, 자치구의회와 권역별 합동공청회에 이어 지난 19일 동구를 시작으로 22일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광산구(광산구청 윤상원홀), 27일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남구(빛고을 시민문화관) 등에서 5개 자치구를 순회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남 기자

광주·전남통합협의체 “특별법, 시·도민 의견 적극 반영하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협의체 논의에서 “지역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에 시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회는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4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영문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강위원 전남도부지사과 지역 경제계·학계·학생·시민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강 부시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며 “10일 전 까지만해도 시도 통합이 되겠느냐, 가능하나 했는데 최근에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도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전남은 이제 가능 여부를 넘어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통합의 완성도를 높일 것인지를 논의하는 수준에 이르렀

다”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주민투표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밑도 없게 수렴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중심 성장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는 지방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이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관광산업 등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권한과 특례를 확보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은 “처음에는 통합이 위에서, 밑에서 물결이 합쳐져 쉽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전남이 손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해를 볼 것이다 광주 술렁이 심화 될 것이다 등 막연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시도민 공청회에서 나오는 지역민의 소리를 참고해 특별법에 넣어 각 지역이 소외될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통합과 관련 광주와 전남 지역민의 걱정이 많다”며 “상대로 쪽의 이야기를 좀더 세심하게 경청하면서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Self 장어명가 청산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